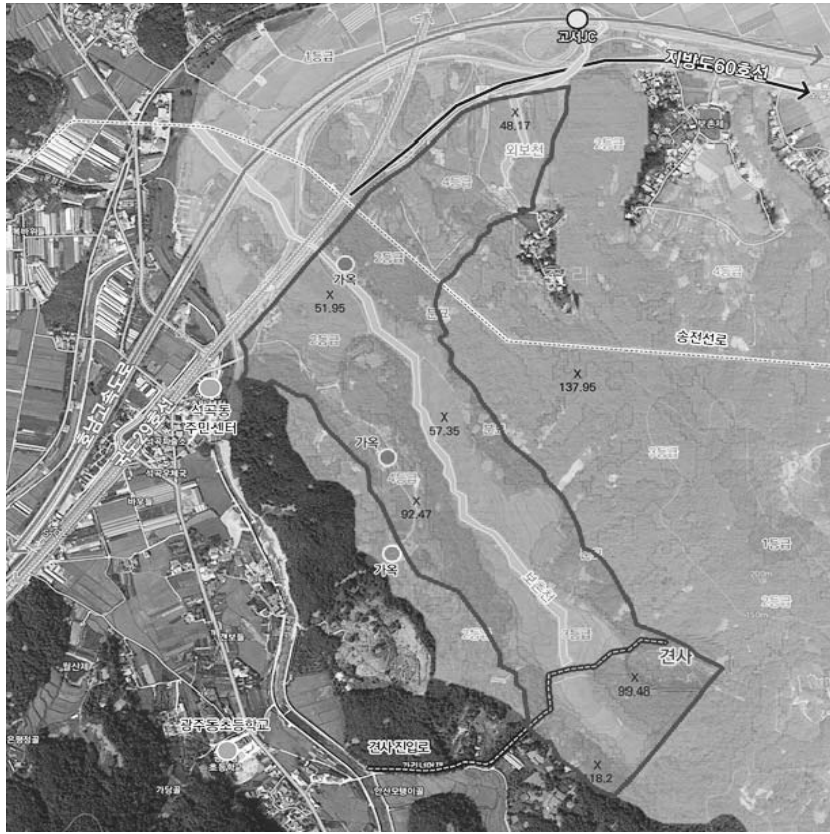


담양 보춘지구 개발허가 제한

지정기간은 오늘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부동산 투기·무분별한 개발 방지 목적



담양군 고서면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역으로 지정됐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고서면 보춘리 일원 885,731㎡(약 0.88㎢)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3년이다. 제한지역은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풀깎는 쌓아놓는 행위, 농지·산지 전용허가 협의 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이 제한된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와 제한고시일 전에 접수된 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신고, 개별법에 의한 승인, 인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행위, 고시일 이전 현재 거주민의 주택 및 부속물, 공공시설물 등의 증개축,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은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통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의회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

내년부터 지급

구례군의회는 19일 마무리된 제264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구례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승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철회하는 등 군 내의 정세가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농어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 보전 가치가 절대적이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보전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였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어, 오는 2020년부터 구례군에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도비 40%, 군비 60%로 총당되며 연 2회 각 30만 원씩(총 6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수당 지급은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 실천활동

을 확실히 위하여 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이승욱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시 '희망이 넘치는 농촌, 노년이 행복한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군민과 약속한 대표선거공약이며, 이 의원은 선거공약의 적실성과 반응성, 실현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우수상)'을 전남에서 유일하게 수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익(농민) 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보성경찰, 겨울철 결빙구간 및 공사구간 일제 점검



보성경찰서에서는 19일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겨울철 상습 블랙아이스 및 결빙구간 21개소와 도로공사 현장 10개소에 대해 시공사 및 도로관리청과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빙구간 안내판 설치와 각종 공사 안전시설물 방지 행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 등 겨울철 사고예방활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보성경찰서는 겨울철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블랙아이스 및 도로공사 구간 선형변경과 차로감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

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선제적으로 각종 도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통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차복영 경찰서장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이 확보된 보성군이 되도록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교통사고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공사 시공사 등 모든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안규일 기자

곡성군 오산면, 2019년 내내 사랑과 온정의 나눔 이어져



곡성군 오산면은 올 한 해 주민들의 나눔 손길이 이어지며 총 218명에게 각종 지원 및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월에는 (주)인콘 노동일 대표가 지정 기탁한 1천 1백만원으로 전기 시설도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주민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 지역 업체인

성산건설에서는 중장비를 이용해 진입로를 만들어주며 온정을 보였다. 오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십시일반 이어달리기라는 기부 챌린지와 사랑의 모금함 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259명이 참여해 총 2,000,980원이 모금됐고, 기부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다. 특히 기부 챌린지의 취지를 듣고 재경향우회 김병수 씨가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2백만원을 지정 기탁해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오산면 복지기동대원들의 활약도 빛났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무더운 8월, 독거노인 가구를 하나하나 방문하며 수전 상태를 전수 조사하

고 총 20가구의 노후된 수전을 교체했다. 최근에는 이웃들의 따뜻한 열정을 위해 보일러가 오래돼 따뜻하지 않다는 주민에게 보일러 배관 청소를 실시했다. 나눔이 만들어낸 따뜻한 온기는 오산면 전역으로 확산됐다. 연화마을 허중수 이장은 직접 지은 햅쌀 10kg 20포대를 조손가정과 독거노인 가구에 후원했다. 옥과 한우촌 김일재 대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사골찌 230포를 각 마을경로당 23개소에 기증했다. 손인자 오산면장은 "내년에는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영광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마무리 총력

영광군은 지난 18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는 올 한 해 동안 성과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남은 체납액에 대하여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그동안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였으며 부서별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군은 앞으로도 계속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모든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불금)압류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강영구 부군수는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동안 세외수입 업무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